

정책연구 2007-06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안순권 · 김필현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1판1쇄 인쇄/2007년 9월 17일

1판1쇄 발행/2007년 9월 21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종석

편집인 · 김종석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30-0

값 5,000원

목 차

<요 약>	7
I.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23
II. 독일 경제회복의 배경	25
1. 세계 경제의 활황	25
2. 구조개혁의 성과	28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점유율 확대	48
4. 인수 및 합병(M&A)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54
5. 신성장 동력 확충	59
III. 평가와 전망	66
IV. 시사점	72
참고문헌	76

표 목 차

<표 1> 독일 경제지표 추이	3
<표 2> 독일의 수출 현황	3
<표 3> 독일 자영업자 비중과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9
<표 4> 고용보호법규(EPL) 강도 비교	31
<표 5> 독일의 최근 기업관련 세제개혁 내용	3
<표 6> 독일의 재정안정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8
<표 7>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비교(GDP 대비)	39
<표 8> 독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예산	6
<표 9> 독일의 지역별 나노기술 네트워크	6
<표 10> 주요국 서비스 산업 비중	6
<표 11> 독일의 국제수지 구조	7

그림목차

<그림 1> 수출의 독일 경제성장 기여도	0
<그림 2>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0
<그림 3> 독일의 국내투자과 해외 직접투자 추이	2
<그림 4> 독일과 EU지역 실업률 추이	8
<그림 5>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3
<그림 6> 독일의 고용환경 지수 동향	3
<그림 7> 주요국 규제개혁 성과 비교	4
<그림 8> 독일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0
<그림 9> 혁신지수 국제비교	5
<그림 10>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3
<그림 11> 독일의 장기 기업대출 금리 추이	5
<그림 12> ZEW 경제환경 지수 추이	7
<그림 13> 독일의 국가경쟁력 순위	8
<그림 14> 독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변화 추이	0

<요 약>

I.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 독일경제는 최근 성장회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현상을 보이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
 - 최근 독일 경제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 현상임.
 -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은 경기순환요인과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 수출호황이 내수확대로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II. 독일 경제회복의 배경

1. 세계 경제의 활황

- 수출호조가 2004년 이후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
 -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의 독일 수출이 급증
 - 투자와 소비의 지속적 회복으로 성장견인 역할이 내수로 점차 이동
 - 수출호황이 내수확대로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독일경제의 회복세는 유로지역의 호황과 선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 독일경제가 견인하는 유로지역의 회복은 다시 독일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룸.

2. 구조개혁의 성과

가. 노동시장 개혁

□ 독일정부는 복지 의존에 따른 근로기피 억제, 자영업 지원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개혁을 추진

-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Hartz I ~ III법을 시행, 연방고용청 및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일자리 취업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
- 2005년 1월부터 Hartz IV법을 시행하여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실업급여제도를 개정

□ 독일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 경제사회의 전반적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다2010'에 의해 2004년 1월 이후 신규 고용 시 해고보호 조항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등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
- 2005년 11월 이후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림.
-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단위 협약으로 노사협상을 이끌어 감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고용구조가 계약직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음.

- 독일 노사는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노동시간 연장(주 35시간 → 40시간)에 합의하는 등 노동시간 연장이 확산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비용 하락 및 고용환경 개선과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를 유발하여 내수 확대의 기반을 조성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고용전망도 개선됨.

나. 공공부문 개혁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큰 정부의 폐해가 점차 심화됨.

- 복지향상에 대한 독일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비중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

-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입지 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

□ 독일정부는 2002년 이후 연방주의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

- 200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정안정협약을 변경하여 주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비율을 50%에서 55%로 높이고 주정부의 연간 지출 증가율은 1% 이내로 억제하도록 규정

□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실현수범하기 위해 재정지출 합리화, 공무원 감축 및 급여인상 억제도 시행

-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전체의 2.6%) 감원 계획

- 연방정부 공무원 및 독일연방은행 직원의 상여금 삭감(2006년 독일정부예산에 반영)

- 독일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근로자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세계획으로 2001~2009년 중 약 60억 유로를 감세
 - 지난해 11월 독일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혁안(2008년 시행 예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300억 유로 낮출 전망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

- 재정개혁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3년 GDP 대비 4%에서 2006년 1.3%로 하락

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 독일정부는 연금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금개혁 법안을 시행
 - 독일의 공적연금은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감소로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
 - 사용자의 연금보험은 줄이고 근로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노동자의 퇴직연령을 늦추어 연금 부담 총액을 확대한 반면 연금급부 수준은 인하

- 독일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04년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
 - 의약품, 진료비 및 입원비 환자부담을 높여 2007년까지 건강보험비용을

230억 유로 절감하고 350여 개의 의료보험기금을 통폐합

- 종합병원의 진료비용 감축을 위해 모든 질병을 질병군으로 분류하여 각 질병군에 상응하는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2004년부터 도입

라. 경제활성화 조치

□ 독일정부가 2003년 3월에 발표한 노동 및 경제개혁 조치인 Agenda2010에 따라 창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제조업 분야의 장인(Meister) 자격 요건 면제
- 소유자 원칙 폐지 등 창업촉진 및 투자확대

□ 독일정부의 2005년 3월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창업지원, 금융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등 기업지원대책이 포함됨.

- 창업 업체의 최저자본금 요건 축소, 등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의 전자등록제 실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행정처리 간소화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

□ 독일정부는 지난해 11월 2012년까지 유럽지역 기업의 행정비용을 25% 감소하기로 한 EU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인 유한책임회사(GmbH: Gesellschaft mitbeschränkter Haftung)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GmbH 법의 현대화와 남용방지 법안. 이 2007년 5월 독일 각의에서 의결되었음.
- 경쟁법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경쟁관련 규제를 완화

- 중소기업 관련 행정부담의 간소화

- 독일의 기업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

□ 독일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하여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점유율 확대

□ 독일 기업들은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 포춘지가 선정한 2005년 세계 500대 기업 중 35개가 독일 기업이며 이 중 17개가 제조업체

□ 중소기업은 독일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440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약 72%에 해당

-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품질 및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 명성

□ 독일의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회복세

- 독일은 1990년대에 전자기기, 설비, 광학기계 등 전통적으로 경쟁우위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점유율 하락

- 독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이후 유로화 약세, 품질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
-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는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독일정부의 대폭적 지원방안이 주효
- 독일의 기술혁신역량은 세계 최고수준
- EU 리스본 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
- 구 동독지역에서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독일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개별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꾸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원 승인
- 대학과 연구소의 상용화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연구프리미엄제도 도입
- IT투자의 증가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 IT투자가 1995~2000년간 13.3%에서 16.2%로 증가
- 독일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1999~2005년 중 연평균 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를 넘어섬으로써 1980년 이후의 하락추세가 지난해부터 상승 반전한 것으로 분석

4. 인수 및 합병(M&A)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 독일 기업들은 M&A를 통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쟁압력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2005~2006년 중 독일 기업들의 M&A 규모는 연평균 1,600억 달러로 2002~2004년 중 평균 840억 달러의 약 2배에 해당

□ 최근 독일 M&A 활황은 거액의 자금이 동원되는 등 9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주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1990년대의 M&A 붐과는 달리 최근 M&A는 대부분 현금과 채권발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에서는 주로 화학, 제약 산업 관련 부문에서 대규모 M&A가 이루어짐.
- M&A가 활발해지면서 주주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M&A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기업 간 M&A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2002년의 큐라키테 AG와 비타레스크 바이오텍 AG 간의 합병은 두 기업의 취약점을 상호보완하는 성격을 띠.
- 비아셀도 쿠리온 테라퓨틱스 AG 인수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

5. 신성장 동력 확충

□ 전통적 주요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산업 등 첨단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바이에른주가 IT산업, 베를린이 BT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 독일 내 BT 관련 회사들과 연구기관들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집중
- 1995년 이후 이 지역에 위치한 생명분야 기업의 수는 100여 개 이상으로 증가, 산학 연계로 신기술 개발
- 2001년 이후 베를린의 BT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2001년 수출 59억 달러, 전년에 비해 약 20% 증가)
- 바이에른주에는 2만 개 이상의 IT 기업들이 약 35만 명을 고용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협력을 위한 경쟁’과 수월성 원칙을 기본 철학으로 각종 산업 및 지역 혁신 정책들을 펴고 있음.

- 지역클러스터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레지오, 이노레지오, EXIST 등을 들 수 있음.
-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1995년에 BMBF에 의해 개시됨.
- 1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선발되어 2002년까지 지원을 받음.
- 이노레지오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의 혁신능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며, 1999년에 개시됨.
- EXIST 프로그램은 대학과 민간부문 간의 지식이전과 대학창업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에 도입됨.

□ 독일의 나노/바이오 관련 첨단 기술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우수한 기술 혁신력이 효과적으로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독일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의 ‘소재연구’, ‘물리기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기술 육성을 시작
 -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나노기술 개발로 인해 2006년 말까지 10,000~1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 특히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재료/제조, 전자&광학, 바이오테크/의료와 장비개발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 독일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지원 프로젝트인 산학연 협력의 나노기술 관할센터(Competence Center Nanotechnology) 육성으로 소위 클러스터 형성
- 클러스터는 지역적 개념이 아닌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협회성격이 강함.
 - 정부 지원으로 구성된 CCN은 9개, 기타 대학 내 연구센터가 4개로 집계, 참여기업은 440여 개
- 독일은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 자동차, 전자, 광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나노전자공학과 관련된 독일 전자제품 및 부품시장은 현재 약 200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낮은 형편이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형 엔진 개발, 공해물질 감소 등의 환경관련 부분과 승객의 안전과 편의 등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독일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Bio Industry 2021’을 통해 관련 기술을 상업화하는 산학공동의 투자 기회를 제공

- 2021년까지 6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에서의 추가 지원을 합치면 총 1억5천만 유로 규모의 산업용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전망
- 대학과 연구소들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기업 간 가치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

□ 독일은 미국·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옴.

-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독일의 서비스 산업은 총부가가치 대비 70%선을 넘어섰으나 미국·영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열위

III. 평가와 전망

□ 독일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2~3년간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 초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련의 개혁의 성공 가시화로 독일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으나 지속 여부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실행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
- 독일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최대 요인은 정부행정 및 기업경영효율이 상대적 열위

□ 미온적인 개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2%대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1% 중반에 머물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에 힘입은 재정적자의 획기적인 감소세가 지속될지는 단정하기 아직 이룸.

- 노동·복지·교육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속적인 구조개혁 실행으로 성장잠재력이 제고되어야 재정건전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막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독일경제의 큰 짐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및 경기침체 등으로 1990년대에 크게 늘어난 복지비 비중을 줄이는 데 뚜렷한 성과를 아직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
- 통일 후 동독주민의 합류에 따른 복지지출의 절대적 증가분은 독일경제가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 의한 노동참여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과중한 복지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열위는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경쟁법 개선 등 이미 발표한 계획의 시행이 중요
-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없이는 독일경제는 잠재성장률을 2%대로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IV. 결론 및 시사점

□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및 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못지않게 기

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어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 및 상여금 삭감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 함.
- 지속적 성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의 끊임없는 확충이 중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
-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 I.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 II. 독일 경제회복의 배경
- III. 평가와 전망
- IV. 시사점

I.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¹⁾

□ 독일경제는 성장회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현상을 보이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

- 지난해 성장률 2.7%로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아 2000년(3.2%) 이후 최고 기록
- 경기회복으로 독일경제의 최대 난제인 실업률도 올 3월 9.2%²⁾로 1995년 이후 최저수준. 경기회복에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로 안정되어 있음.
- 재정적자도 지난해 EU의 재정건전화 협약(SGP)³⁾상의 상한(3%) 이내인 GDP 대비 1.3%로 축소

<표 1> 독일 경제지표 추이

(단위: %)

	1970~79	1980~90	199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성장률	3.2	2.2	1.9	1.2	0.1	-0.2	1.6	0.9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9	2.9	2.4	1.9	1.4	1.0	1.7	2.0	1.7
실업률	2.3	6.0	7.4	9.4	9.8	10.5	10.6	11.7	10.8
경상수지	0.87	-0.35	-1.05	0.2	2.3	2.2	3.8	4.1	4.5
재정수지	-1.7	-2.2	-3.4	-1.6	-3.2	-4.2	-3.6	-3.2	-1.3

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자료 : www.OECD.org; 독일연방은행

- 1) 이 정책보고서는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5월호의 이슈분석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의 내용 중 노동 및 공공개혁 부문을 보완하고 독일 경제 회복의 다양한 배경을 추가하여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한 것임.
- 2) 독일 연방노동사무국(Federal Labour Office) 정의에 따른 실업률임.
- 3) 재정건전화 협약은 유럽통화동맹(EMU)의 신뢰도확보를 위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재정적자의 GDP 3% 이내 억제와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되었다.

□ 최근의 경제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 현상이 두드러짐.

-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은 경기순환요인과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 경기순환요인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4년 이후 경기상승 국면 진입. 수출호조가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투자·소비 등 내수회복으로 확산
- 독일정부의 재정·복지·노동개혁 등의 효과의 가시화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데 힘입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상승세 및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II. 독일 경제회복의 배경

1. 세계 경제의 활황

□ 수출호조가 2004년 이후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

-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04년 이후 경기상승 국면 지속
 - 세계경제의 회복 속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의 독일 수출이 급증하며 경기 회복을 견인
 - 지난해 수출은 14%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약 30%를 차지

<표 2> 독일의 수출 현황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25	3.2	5.4	4.6	11.7	15.3
자본재수출	45	1.9	4.8	4.4	8.7	12.9
중간재수출	-9	6	1.7	7.8	13.2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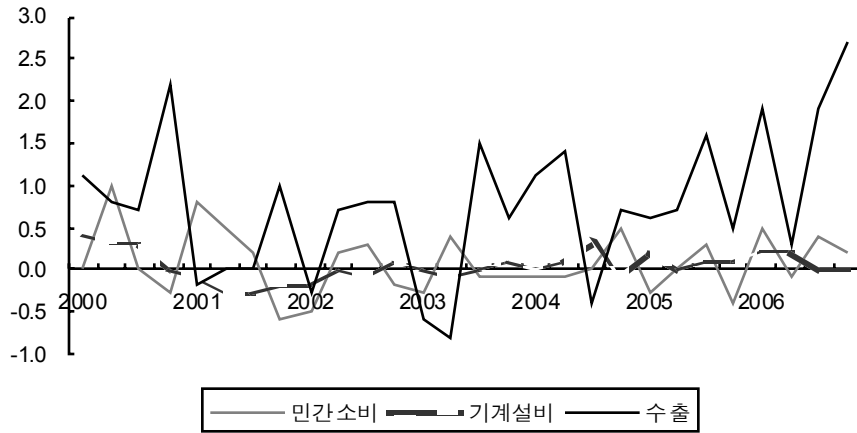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은행

- 2000년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수출의 독일경제 성장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투자와 소비의 지속적 회복으로 성장견인 역할이 내수로 점차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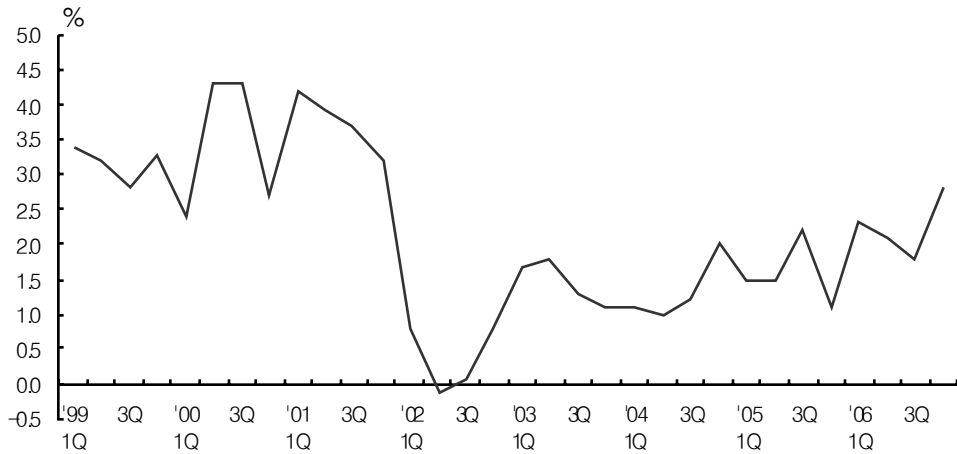
- 소비증가율이 지난해 3/4분기 0.7%에서 4/4분기 1.8%로 높아지는 등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5년 초를 바닥으로 올 2월까지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앞으로도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시사

<그림 1> 수출의 독일 경제성장 기여도



주: 기여도는 ARIMA 방식에 의한 추정치임.
 자료: 독일연방은행

<그림 2>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독일연방은행

- 투자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9.8%에서 3/4분기 7.95, 4/4분기 7.2%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유지

- 향후 기업의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Ifo산업신뢰지수는 올 들어 1~2월 중 둔화된 뒤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함으로써 향후 기업투자의 건조세가 지속될 가능성 시사

<그림 3> 독일의 국내투자과 해외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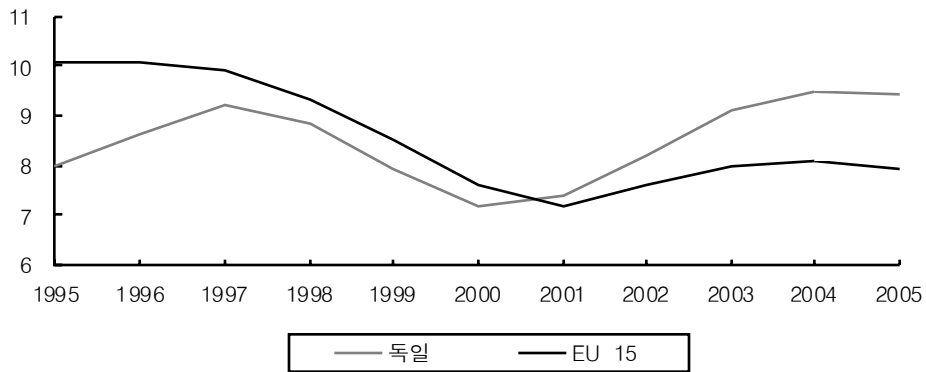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독일연방은행

- 수출호황이 내수확대로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02년(-0.57%), 2003년(-0.96%), 2004년(-0.14%)로 감소했던 총취업자수가 2006년 27만 명(0.69%) 증가
- 독일경제의 회복세는 유로지역의 호황과 선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유로지역과 독일의 경제성장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속

-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독일경제의 유로 내 비중은 22%로 가장 높음.
- 유로지역과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로 보면, 독일(0.98)이 이태리(0.84)나 프랑스(0.95)보다 더욱 유로지역 전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
- 1997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이 EU지역 실업률을 선행하고 있어 독일 고용개선은 유로지역의 실업률 추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독일과 EU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OECD

- 독일경제가 견인하는 유로지역의 회복은 다시 독일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룸.

2. 구조개혁의 성과

가. 노동시장 개혁

- 독일정부는 복지 의존에 따른 근로기피 억제, 자영업 지원 및 적극적 노동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개혁을 추진

-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Hartz I ~III법을 시행, 연방고용청 및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일자리 취업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⁴⁾
 - 노동자의 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mini-jobs)이면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납부를 면제하고 400~800유로(midi-jobs)일 경우 세금을 대폭 경감
 - 수공업법을 개정하여 단순직종에 대한 장인(Meister) 자격증제도를 철폐⁵⁾하는 등 1인 자영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 실업경감을 위한 자영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창업보조(Start-up subsidy) 프로그램을 실시
 - 실업자들은 자영업 창업 시 창업보조 프로그램과 1980년 후반에 시행된 창업연결(Bridging allowance) 프로그램 중에서 양자 선택
 -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실업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창업연결 프로그램은 3년간 순차적으로 지불되며, 첫해에는 600유로, 이듬해 360유로, 마지막 해는 240유로를 지불
 - 1994~2004년 기간 중 창업지원 건수는 37,000건에서 350,000건으로 급증했으며, 장기실업자들의 참여율도 상승 추세에 있음.

<표 3> 독일 자영업자 비중과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자영업 비중	10.2	10.3	10.4	10.6	11.0
참여율	2.5	2.7	3.5	6.9	9.0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 various issues

□ 2005년 1월부터 Hartz IV법을 시행하여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실업급여제도를 개정

4) 한국은행(2005a), p.4.

5) 장인(Meister) 자격 요건 면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p.20 규제완화 및 기업지원대책을 참조할 것.

-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축소했으며, 2006년 2월부터 취업기피 등 실직자의 구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2005년 이후 실직수당의 실적 전 급여 대체율을 60~67%에서 53~57%로 인하
 - 2005년 이후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실직 후 12~32개월간에서 12개월로 축소하였으며, 다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실직 후 18개월간 실업수당이 지급됨.
 - 실업혜택은 실업자의 총자산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결정
 - 추천받은 일자리를 실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실업급여기간을 단축
 - 하르츠 IV법의 시행으로 210만 명이 실업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실업자의 경우 지급액이 현행 530유로에서 350유로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이 법은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평가됨.
 -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지방정부가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social welfare benefits)를 통합,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실업자로 새로 등록⁶⁾
 - 사회복지급여 수령자는 실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 노력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
- 독일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
- 경제사회의 전반적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다2010'에 의해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
 - 2004년 1월 이후 신규 고용 시 해고보호 조항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

6) 노동부(2006), p.54.

- 창업 후 4년간 해고가 용이한 임시직 근로자 채용 가능
 -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해고자 선정기준인 사회적 선택기준을 근속기간, 나이, 부양의무 및 장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지식, 능력, 인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가능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단순하고 비용절감적인 화의절차에 의해 고용 상태 종료 가능. 이때 근로자는 해고구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속년당 반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 중 선택 가능
- 2005년 11월 이후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⁷⁾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림.
-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적연금, 의료보험임금 등 보조적 인건비부담을 40% 이내로 감축⁸⁾

<표 4> 고용보호법규(EPL) 강도 비교

	정규직 고용			임시직 고용			집단해고		총EPL		
	80년대 말	90년대 말	2003	80년대 말	90년대 말	2003	90년대 말	2003	80년대 말	90년대 말	2003
프랑스	2.3	2.3	2.5	3.1	3.6	3.6	2.1	2.1	2.7	3.0	3.0
독일	2.6	2.7	2.7	3.8	2.3	1.8	3.5	3.8	3.2	2.5	2.2
스웨덴	2.9	2.9	2.9	4.1	1.6	1.6	4.5	4.5	3.5	2.2	2.2
한국	-	2.4	2.4	-	1.7	1.7	1.9	1.9	-	2.0	2.0
일본	2.4	2.4	2.4	1.8	1.6	1.3	1.5	1.5	2.1	2.0	1.8
영국	0.9	0.9	1.1	0.3	0.3	0.4	2.9	2.9	0.6	0.6	0.7
미국	0.2	0.2	0.2	0.3	0.3	0.3	2.9	2.9	0.2	0.2	0.2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7) 정식고용을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기간

8) 2007년 1월에 실업보험료가 2.3%포인트 인하되고 의료보험료가 19.5%에서 19.9%로 인상되며 평균 의료보험료가 13.3%에서 13.9%로 상승하면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부담은 총 1.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41.0%였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부담률은 2007년에는 39.7%로 하락할 것으로 독일경제기술부는 추산하고 있다(독일경제기술부 2007년 연례보고서,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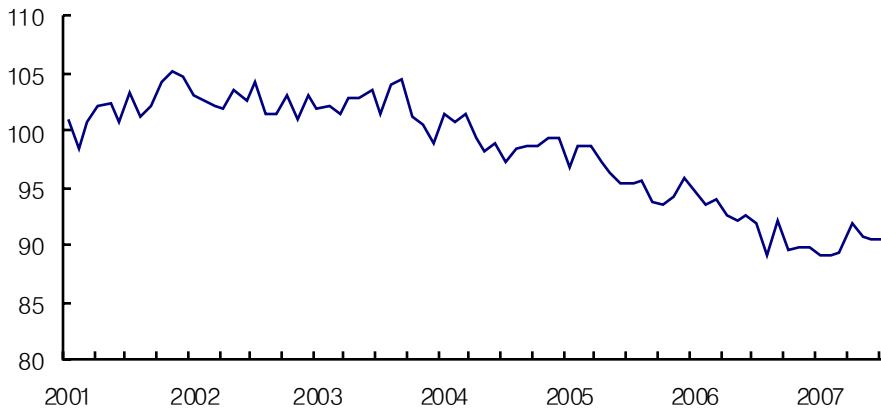
- 독일은 프랑스 등에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로 유연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 OECD가 각국의 고용보호법규(EPL)에 의한 노동규제 수준을 계량화한 EPL강도 지수의 추이를 보면 독일의 경우 1980년대(3.2) → 1990년대 말(2.5) → 2003년(2.2)로 점차 하락 추세. 2003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감안하면 독일의 EPL강도 지수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단위 협약으로 노사협상을 이끌어 감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2005년 기준으로 사업장의 13%가 단체협약 예외조항 적용에 해당되었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예외조항을 실제 적용했음.⁹⁾
 -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 비중이 구 서독지역에서는 1995~2005년 기간 중 72%에서 59%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1996~2005년 기간 중 56%에서 42%로 하락
- 고용구조가 계약직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 독일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이 계약직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임. 기업들은 법규의 허용폭이 확대되고 노조의 파워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기간 2년 미만의 계약직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¹⁰⁾
- 독일 노사는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노동시간 연장(주 35시간 → 40시간)에 합의하는 등 노동시간 연장이 확산
 - 독일 중소기업들은 노동시간 연장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노동시간 연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9) IAB Establishment Panel

10) 정동철(2007), p.4.

- 독일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저하, 이익감소 등으로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했으나, 최근 노조측과 추가적 임금지급이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대신 해외공장 이전을 유보하는 사례가 많음.¹¹⁾
-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기업의 공동의사결정도도 수 술대에 오름.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조권한의 축소 방침을 검토

<그림 5>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자료: 독일연방은행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비용 하락 및 고용환경 개선과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를 유발하여 내수 확대의 기반을 조성
-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으로 독일의 실효환율이 하락함으로써 독일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함.

11) 폭스바겐의 경우 IG Metall과 2004년 11월 3일 서독지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향후 28개월간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노동자 10만3천 명의 고용보장을 2011년까지 한 반면, 기존노동자들은 1인당 1천 유로의 보너스를 1회만 지급받게 되었고, 신규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존 임금에서 10% 삭감하였다.

- 수출비중을 감안한 명목 유로환율은 20% 상승한 반면 독일의 실질실효 환율은 10% 하락
 -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가격경쟁력을 보면 임금관련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던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됨.
 - 2000년대 들어 가격경쟁력이 다시 저하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개선된 수준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고용전망도 개선됨.
- 독일의 무역, 산업 관련 기업들의 고용전망을 나타내는 Ifo 고용환경 지수¹²⁾는 2002년 말을 저점으로 지속적 상승 기조를 보임.
 - 고용환경은 노동시장이 개혁정책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2005년 말부터 개선의 폭이 커지고 있음.

<그림 6> 독일의 고용환경 지수 동향



자료: Ifo 독일의 고용환경 지수, 2007.

12) Ifo 고용환경 지수는 매달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분야 700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의 고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기준연도 = 2000).

나. 재정 개혁

□ 통일 후 독일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

- 서독은 1980년대 말에 흑자재정을 달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건실했으나 통일 후 독일의 국가재정은 크게 악화되어 재정적자가 2002년 GDP의 3.7%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EU의 재정건전화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상의 상한(3%)을 지키지 못함.
- 2005년 중 정부부채 규모도 GDP의 71.1%로 동 협약상의 상한선(GDP의 60%)을 4년 연속 위반
- 대규모 재정적자의 발생은 △주정부 간 재정균등화 관행에 따른 비효율적 재정운영,¹³⁾ △구 동독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및 동독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고용 보조금 지급 증가 등에 따른 것임.¹⁴⁾
 - 재정악화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세수증대를 위해 세금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
 -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재정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각 주(州)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주의)에 따라 각 정부의 예산절약 유인기능이 미흡. 반면 미국·스위스 등 여타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조세 및 지출권한을 보유

□ 독일정부는 2002년 이후 연방주의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¹⁵⁾

- 200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정안정협약을 변경하여 주정부의 재정

13)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와 26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정책을 수립하며, 각 주의 생활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정부의 예산절약 유인이 부족하다.

14) 한국은행(2005a), p.6.

15) 전계서, p.7.

적자 부담비율을 50%에서 55%로 높이고 주정부의 연간 지출 증가율은 1% 이내로 억제하도록 규정

- 유럽국민계정체계 1995를 도입하여 재정회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

□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슬선수범하기 위해 재정지출 합리화, 공무원 감축 및 급여인상 억제도 시행

-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전체의 2.6%) 감원 계획¹⁶⁾
- 연방정부 공무원 및 독일연방은행 직원의 상여금 삭감(2006년 독일정부예산에 반영)¹⁷⁾
- 산업, 주택, 농업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
 - 연방정부지원금을 2000년 100억7천만 유로에서 2009년 54억 유로로 감축
 - 연방정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민관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운송, 병원 및 사회인프라 분야의 PPP 투자규제 완화
 - PPP 관련사업의 평가에 대한 정부의 운용방침 제시
- 재정적자 감축 목표의 절반은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감면 축소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절반은 올해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율 3%포인트 인상에 따른 GDP 대비 1%의 세수증대로 이루어지는데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의 3분의 1은 사회보장비 감축분을 충당

16)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10월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공무원 감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독일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8,000명을 감원할 방침이며 메르켈 총리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2005년 성탄절 보너스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매일경제신문 2005년 12월 13일자 기사).

17) 독일경제기술부, 2007년 연례보고서, p.66.

- 독일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근로자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세계획으로 2001~2009년 중 약 60억 유로를 감세
 - 소득세는 기본세율 및 최고세율을 2001년의 19.9%, 48.5%에서 2005년에는 15%, 42%로 각각 인하
 -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년 40%에 달했던 세율을 2004년부터 25%로 대폭 인하

- 지난해 11월 독일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혁안(2008년 시행 예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300억 유로 낮출 전망이다¹⁸⁾
 - 특히 제조업 분야의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은 향후 10년간 24.82% 축소될 전망
 - 반면, 과세표준의 확대로 전체 세금 징수액은 최대 5백만 유로로 축소
 - 전반적 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

<표 5> 독일의 최근 기업관련 세제개혁 내용

세금 축소 방안	세금 확대 방안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	영업비용 관련 무역세 공제 폐지
일률적 기초 무역세율(trade tax uniform base rate)을 3.5%로 인하	무역세 부과대상 이자소득 확대
소득세 목적의 무역세액공제 요율(trade tax credit factor)을 1.8에서 3.8로 확대	세금공제 대상 이자소득 상한선 설치
비법인 상사(unicorporated partnerships)의 사내이익잉여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28.25%로 축소	정률법(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method) 폐지
2009년 1월부터 민간자본소득에 대한 25%의 원천징수	사업기능 이전에 대한 세금 부과

18) ZEWnews(2007)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
 - 2001년 이후 독일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직접세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혁을 추진

□ 재정개혁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3년 GDP 대비 4%에서 2006년 1.3%로 하락

<표 6> 독일의 재정안정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06	2007	2008	2009
재정수입	-0.1	0.5	0.6	0.7
재정지출	0.1	-0.4	-0.5	-0.5
이전지출	0.0	-0.3	-0.3	-0.3
정부소비	0.0	-0.2	-0.3	-0.3
투자	0.0	0.0	0.0	0.0
재정수지 개선 효과	-0.1	0.9	1.1	1.3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2006;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2006.

- 재정적자를 2007년에 GDP의 2.5%, 2009년에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정안정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을 2006년 EU집행위에 제출했으나 조기 달성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시대에 한계를 드러냄.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전후 1970년까지 독일경제의 번영과 독일 국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내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시장실패를 보완 차원에서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은 유지하도록 함.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큰 정부의 폐해가 점차 심화됨.
 - 국민의 복지를 위한 독일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비중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 이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대조적

<표 7>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비교(GDP 대비)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독일	40.4	40.3	38.5	40.9	40.7	39.8	39.5	39.6	38.7
영국	35.3	37.7	36.5	35.2	37.7	37.2	35.8	35.9	34.8
미국	27.0	26.1	26.7	27.6	28.9	29.1	26.7	25.9	25.8
프랑스	40.5	42.6	42.2	42.9	44.4	44.0	43.4	43.4	43.3
스웨덴	52.1	54.2	53.2	48.5	53.9	51.8	50.1	50.6	50.7
이탈리아	32.5	33.5	38.9	41.2	43.2	43.0	42.5	43.1	43.3
일본	23.0	25.8	29.1	26.7	26.5	26.8	25.8	25.3	25.2
캐나다	31.7	33.7	35.9	35.6	35.6	34.9	34.0	33.8	33.0
호주	28.1	29.0	29.3	29.8	32.1	30.5	31.4	31.6	31.7

자료: OECD Historical Statistics;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2006.

-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쟁과 사회적 형평성이 조화를 이룬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했으나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독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됨.
 - 분배욕구에 부응한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¹⁹⁾
 - 호황의 성과를 재분배로 나누어 가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인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 및 경쟁에 의한 성장 등의 요소가 점차 축소되어 경제의 활력이 약화
 - 과도한 재분배 규정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로 노동의욕이 감퇴했으며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이 높은 실업률을 초래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자유경쟁이 제한을 받으면서 영미식 모델에 비해 글로벌 경쟁 격화, 급격한 기술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²⁰⁾
 - 지나친 정부 개입이 기업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제한하여 경쟁력이 약화됨.
 -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입지 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
 -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정부예산의 약 60%가 지출되고 있음.
 - 독일 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GDP의 약 40%에 달해 미국·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

19) 과도한 사회복지정책 부작용의 구체적 내용까지 대외경제연구원(2005), p7 참조.

20) 김득갑(2002), p.26.

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1) 연금제도 개혁

□ 독일정부는 연금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금개혁 법안을 시행

- 독일의 공적연금은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감소로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
- 사용자의 연금보험은 줄이고 근로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노동자의 퇴직연령을 늦추어 연금 부담 총액을 확대한 반면 연금급부 수준은 인하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11년부터 2025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연금수령 개시 최저연령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 보험료율을 19.5%에서 2030년까지 22%까지 상향 조정
 - 퇴직 전 최종 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을 53%에서 2020년 46%, 2030년 43%로 하향 조정
-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일부를 개인 적립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1857년 이후 근원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고령화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²¹⁾

(2) 의료보험 개혁

□ 독일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04년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

21) 한국은행(2005a), p.8

- 의약품, 진료비 및 입원비 환자부담을 높여 2007년까지 건강보험비용을 230억 유로 절감하고 350여 개의 의료보험기금을 통폐합
 - 의사의 진찰비 중 분기당 10유로를 부담해야 하며, 처방전에 따른 약값의 10%를 부담. 6주 이상 요양 시 보험에서 지급하던 질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의학적 사유에 근거치 않는 불임수술, 출산비용 등을 보험혜택에서 제외
- 종합병원의 진료비용 감축을 위해 모든 질병을 질병군으로 분류하여 각 질병군에 상응하는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2004년부터 도입
- 진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자식 의료보험증을 도입하고 진료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일반 의약품에 대한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고 복잡한 본인부담제도를 단순화

라. 경제활성화 조치

(1) 세금인하 및 재정투융자 확대

□ 독일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인하와 규제완화를 단행

- 독일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근로자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세계획으로 2001~2009년 중 약 60억 유로를 감세
 - 소득세는 기본세율 및 최고세율을 2001년의 19.9%, 48.5%에서 2005년에는 15%, 42%로 각각 인하
 -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년 40%에 달했던 세율을 2004년부터 25%로 대폭 인하

- 독일정부는 경기침체 심화와 실업률 급증에 대응, 2005년 3월 법인세율 큰 폭 인하 및 대규모 재정투자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
 - 법인세율을 종전의 25%에서 19%로 대폭 인하
 - 지방세 및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등을 포함한 독일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법인세율 부담 수준이 종전의 38%에서 32%로 낮아져, 경쟁국 수준(프랑스 34%, 영국 30%)에 근접
 - 운수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에서 향후 4년간 20억 유로를 투자하는 한편 주택재개발 및 고령층의 직업알선을 위해 재정에서 각각 50억 유로, 2억5천만 유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시행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
 - 2001년 이후 독일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직접세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혁을 추진²²⁾

(2) 규제완화 및 기업지원대책

□ 독일정부가 2003년 3월에 발표한 노동 및 경제개혁 조치인 Agenda2010 창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²³⁾

- 제조업 분야의 장인(Meister) 자격 요건 면제
 - 제3자에게 위험요인이 없는 실내장식가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설립·인수의 전제인 장인 자격 구비요건을 면제(총94개 직종 중 41개를 제

22) 독일의 부가가치세율(16%)은 유로지역 평균(18.9%)보다 낮는데 부가가치세율을 19%로 인상할 경우 독일의 민간소비는 1.6%포인트, GDP 성장률은 0.2%포인트 축소되고, 소비자물가는 최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한국은행, 2005b, p.14), 독일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간접세 인상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 관련 설명은 노동부(2006), pp.55-56 인용.

외하고 예외 인정)

- 설비, 전기공 등 위험요인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도 5년 이상 업무전담 또는 경영직위 포함 10년 경험 기능공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운영권을 부여
- 소유자 원칙 폐지 등 창업촉진 및 투자확대
 - 제조업 소유주는 반드시 장인 자격을 소지하도록 하던 것을, 향후는 경영책임자만 자격을 가져도 무관하도록 하여 기업양도 및 존속을 보장하고 자기고용 방식 창업도 활성화
- 제조업 창업 시 연간 영업이익이 25,000유로가 되기 전에는 상공회의소 회비를 면제
- 지자체 사회간접자본·서비스 분야 투자지원 70억 유로, 주택개선 지원 80억 유로 등 총 150억 유로의 장기저리 융자 등 내수 진작

□ 독일정부의 2005년 3월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창업지원, 금융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등 기업지원대책이 포함됨.

- 중소기업에 대한 국영개발은행(KfW)의 저금리(2%) 자금지원 등 대규모 금융지원을 실시
- 창업 및 주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창업 업체의 최저자본금 요건 축소, 등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의 전자등록제 실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행정처리 간소화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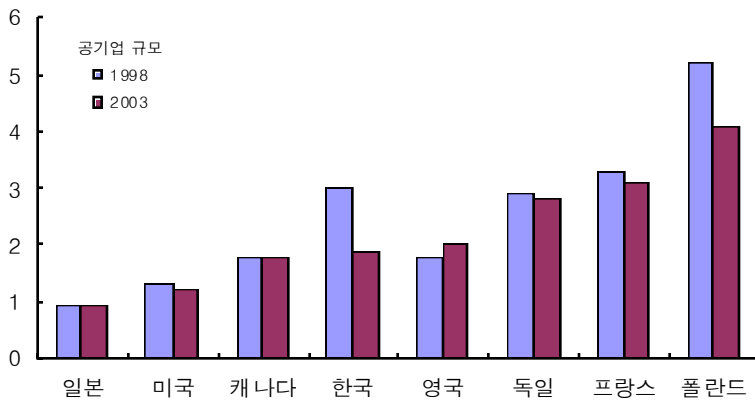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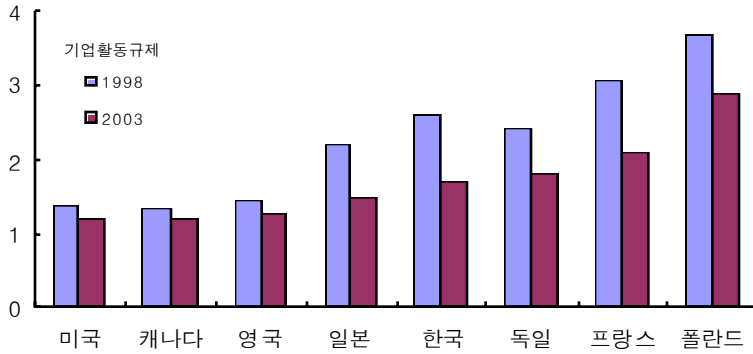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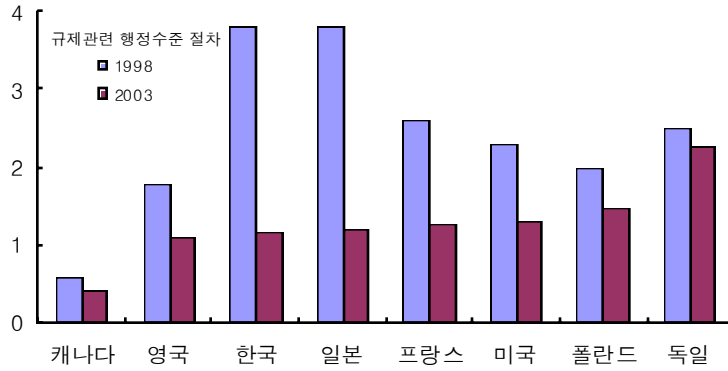
- 독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012년까지 유럽지역 기업의 행정비용을 25% 감소하기로 한 EU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인 유한책임회사(GmbH Gesellschaft mitbeschränkter Haftung)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GmbH 법의 현

대화와 남용방지 법안 이 지난 5월 독일 각의에서 의결되었음.²⁴⁾

- GmbH 설립에 소요되는 최소 자본금을 기존 25,000유로(약 33,500달러)에서 10,000유로(약 13,400달러)로 인하하고, 자본금이 필요 없는 미니GmbH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표본 회사정관에 설립자가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만으로 회사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절차를 간소화
- 경쟁법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경쟁관련 규제를 완화
 - EU집행위를 통한 텔레콤 서비스 분야 관련 법률 보완
 - 경쟁지향적 정책과 시장가격 감정절차의 합리화,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한 정책지원
- 중소기업 관련 행정부담의 간소화
 - 세무회계와 영업 관련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는 매출액 기준 상향조정
 - 대차대조표 공개 기준 영업이익을 3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최소액을 구 서독지역에서는 12만5천 유로에서 25만 유로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현행 50만 유로 기준을 2009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등 세무 절차의 간소화
- 독일정부 차원의 비용모델을 도입하여 기업비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
- 독일의 기업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그림 7> 참조)
 - 1998~2003년 기간 중 규제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개혁의 정도가 적으며, 규제의 수준도 여전히 높음.
 - 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진전이 없으며 선진국 중 프랑스에 이어 가장 규모가 큼.

24) 외교통상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2007년 5월 24일자 보고서

<그림 7> 주요국 규제개혁 성과 비교



자료: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2006.

(3)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중심지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노사정 협력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²⁵⁾

- 독일의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슈투트가르트는 1990년대 중반 주력산업의 침체로 수출이 5% 감소하고 실업률이 9%를 상회하는 등 경제 위기를 겪음.
- 이 지역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과 산업구조의 전반적 혁신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정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
 - 지역협의회는 5년마다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의회를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
 - 의회는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함.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홍보, 기업인 대상 자문 제공,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을 맡는 지역경제추진회사가 발족됨.
- 이러한 자구 노력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2000년 경제성장률은 4%를 초과했고, 실업률도 5%로 하락

(4) 구 동독지역 경제부흥 계획

□ 독일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음.²⁶⁾

-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하여 지역 특수성을 최대

25) 대한상공회의소(2006), pp.5-6.

26) 정진상(2006), pp.95-102.

한 반영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 이노레기오(InnoRegio)

- 구 동독지역 내 산학연 간 인적교류와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각 지역별로 모집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를 거쳐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
 -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는 최대 1,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6년 현재 '기업지역' 관련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1,000건이 넘음.

□ 네트워크 매니지먼트(NEMO)

- 2002년 2월 구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들 간의 상호협력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각 지역들 간 경쟁을 거쳐 선발된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경제노동부가 예산을 지원
 - 2002년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젝트당 최고 30만 유로까지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술혁신 인건비 조성(PFO)

-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R&D 관련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제조부문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 250명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점유율 확대

□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제조업 강국

- 2005년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 생산(에너지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독일(25.5%), 일본(19.3%), 미국(17.0%), 영국(17.4%), 프랑스(15.1%)
 - 2003년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 독일(31.2%), 프랑스(21.3%), 영국(17.8%), 미국(6.5%), 일본(9.9%)
- 독일 기업들은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 포춘지가 선정한 2006년 세계 500대 기업 중 35개가 독일 기업이며 그중 16개가 제조업체
 - 자동차: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 화학: 뢰프, BASF, 바이엘, 헨켈
 - 전기기계: 지멘스, 보쉬
 - 철강: 티센크루프
- 중소기업은 독일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440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약 72%에 해당
 -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품질 및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 명성
- 독일의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회복세
- 독일은 90년대에 전자기기, 설비, 광학기계 등 전통적으로 경쟁우위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점유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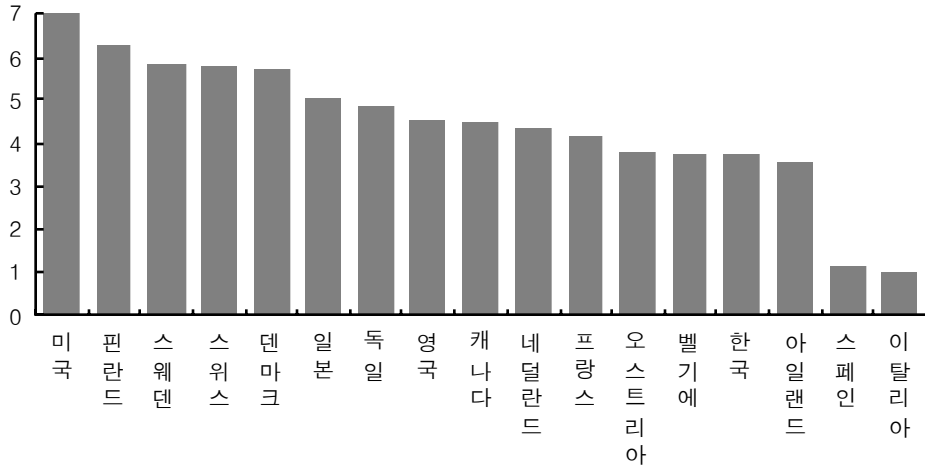
<그림 8> 독일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5.

- 독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이후 유로화 약세, 품질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
-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는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독일정부의 대폭적 지원방안이 주효
 - 독일의 기술혁신역량은 세계 최상위권
 - 2003년 독일의 특허건수는 7,111개로 미국(19,222), 일본(13,564)에 이어 OECD 3위
 - 2003년 독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2.52%로 EU 15개국 평균인 1.9%를 상회함.
 - 신상품이나 신제조공법의 개발에서도 독일 기업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2위, 서비스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
 - R&D 집중산업의 수출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 독일정부는 2009년까지 R&D 투자에 6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그림 9> 혁신지수 국제비교



자료: 독일경제연구소의 2006년 독일 혁신지수 보고서

- 독일경제연구소의 2006년 독일 혁신지수 보고서(Innovationsindikator Deutschland 2006)에 따르면 독일 산업의 세계경쟁력을 측정된 결과 혁신지수 전체 평점에서 독일은 2005년 4.66보다 다소 향상된 4.88을 기록하면서 17개 조사 대상국가 중 7위를 기록
 - 미국·핀란드·스웨덴 등이 상위 1·2·3위를 기록했고, 일본이 6위, 한국이 13위
 - 독일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나, 발전 속도는 미흡함.
 - 특히 교육시스템 혁신성의 순위가 11위에 그쳐 독일 교육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체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독일 중소기업들의 혁신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336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약 30%인 101개 업체만이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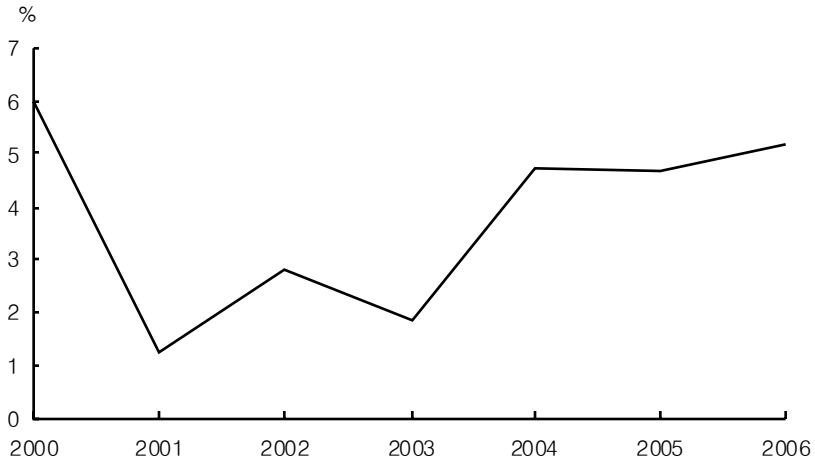
27) 중소기업연구원(2007), pp.1-4.

- 이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종업원 수 면에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음.
 - EU 리스본 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
 - 효과적인 산학 연계를 위해 독일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액을 2006~2009년 기간 중 매년 10%씩 증액
 - 국제협력을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 추구
 - 대학의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010년까지 130억 유로 지원
 - 구 동독지역에서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1998~2002년 기간 중 동독지역 제조업 중 연구관련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8%로 동독지역 제조업 전체 성장률(5.9%)을 상회²⁸⁾
- 독일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²⁹⁾
-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개별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꾸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원 승인
 - 대학과 연구소의 상용화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연구프리미엄제도 도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교육과 지식관리 등을 뒷받침할 새로운 멀티미디어 장치 R&D 프로젝트 추진
 - 경제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측정, 규격, 검사, 품질관리 분야의 새로운 성과나 기술을 신속하게 중소기업에 이전

28)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04.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6)

<그림 10>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독일연방은행

□ IT 관련 투자에 힘입어 8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노동생산성이 상승 반전하는 조짐³⁰⁾

- 독일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1999~2005년 중 연평균 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를 넘어섬으로써 1980년 이후의 하락추세가 지난해 부터 상승 반전한 것으로 분석
-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일본에 뒤진 IT투자를 늘려왔으며 최근 수년간 더욱 가속화됨.
 - 전체 설비투자 중 IT투자의 비중은 지난 95년 13.3%에서 2000년 16.2%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29.9%)에는 뒤지지만, 영국(15%), 일본(16.0%)보다는 높은 수준임.

30) 정동철(2007), p.4.

4. 인수 및 합병(M&A)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 1990년대 말 이후 불기 시작한 M&A의 열풍이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독일 기업들은 M&A를 통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³¹⁾
 - 2005~2006년 중 독일 기업들의 M&A 규모는 연평균 1,600억 달러로 2002~2004년 중 평균 840억 달러의 약 2배에 해당
- 올 상반기에 발표된 해외기업 인수 계획 규모가 8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M&A 열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 총 해외기업 인수액 1,038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 올 2월에 독일 에너지 그룹인 에온(Eon)은 총 552억 유로를 들여 스페인 전력회사 엔데사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성사될 경우 30개국에서 5천 만 이상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전력 및 가스공급회사로 부상할 전망³²⁾
 - 독일 최대 산업용가스 공급업체인 린데(Linde)도 영국 가스업체 BOC를 총 140억 달러에 인수하여 세계 최대 가스업체로 부상할 전망

□ M&A시장의 활황은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대내여건으로는 독일 기업들의 향상된 자금력, 국내 독과점 규제, 독일 자본시장의 M&A에 대한 인식 변화, 저렴한 금융비용 등이 있음.
 - 신규 기업 설립보다 검증된 회사 인수로 사업 확장을 시도
 -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이 비용감소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자금력의 향상이 M&A 실행 자금을 공급
 - 유로화의 강세는 M&A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왔고, 독과점에 대한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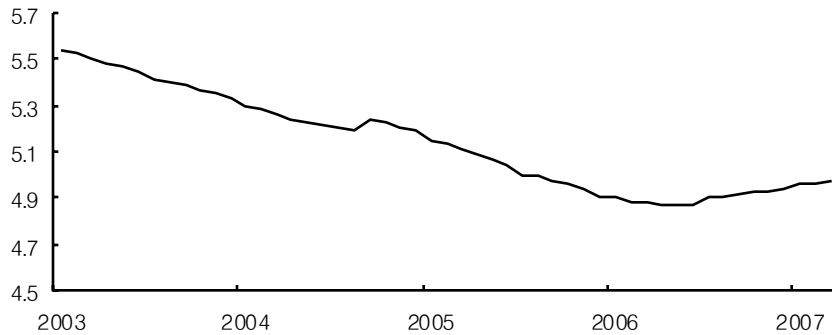
31) 정동철(2007), p.4.

32) 월간 Midas 2006년 4월호

규제는 독일 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를 촉진

- 독일 기업들은 개선된 수익구조의 혜택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M&A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이 M&A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독일 기업의 M&A 증가에는 장기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 인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그림 11> 독일의 장기 기업대출 금리 추이¹⁾



주: 1) 5년 이상 대출
자료: 독일연방은행

- 대외적으로는 독일 기업들은 유로화 강세의 이점을 활용하여 인도와 중국에 맞서 국제 M&A 시장에서 우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최근 독일 M&A 활황은 거액의 자금이 동원되는 등 9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주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1990년대의 M&A 붐과는 달리 최근 M&A는 대부분 현금과 채권발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에서는 주로 화학, 제약 산업 관련 부문에서 대규모 M&A가 이루어짐.
 - M&A가 활발해지면서 주주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M&A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설비계측 회사인 테켄(Techem)은 호주의 맥과이어 은행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대항해 BC Partners를 화이트 나이트로 활용하는 등 M&A 방어와 백기사의 활용이 빈번해짐.³³⁾

□ 그러나 M&A의 성과가 기대보다 저조하고, 무리한 자금조달이 향후 인수 기업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컨설팅 전문회사인 언스트&영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국제 M&A의 약 30% 정도만이 기업가치 신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목표기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 부족과 지나친 낙관론 및 무분별한 기업 확장으로 인한 과도한 구조조정비가 M&A 실패의 주요 요인
- 현금과 부채를 위주로 한 자금조달은 경기침체 시 인수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수합병이 세계화되면서 각국에서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 중
 - 독일의 폴크스바겐법은 단일 주주의 20% 이상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으나,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됨.

□ 독일의 생명공학 관련 산업정책들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왔음.

- 독일의 생명공학 산업은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형편이었음.
- 그러나 1995년 바이오레기오(BioRegio)법의 시행으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이 이루어져 현재 1,208개의 기업들이 생명공학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이 중 572개 기업이 첨단 생명공학 공정을 주로 활용하는 핵심 생명공학(BT)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독일연방통계청), 이는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최대의 규모임.

33) Financial Times, 2006년 12월 8일자

- 그러나 핵심 생명공학 기업의 25% 정도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최근 들어 수익성 저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규모의 경제 부재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수익성 저하와 기술심화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로 이 분야 투자는 줄어드는 상황임.

• 2000년 137억 유로에 달하던 투자가 2004년 현재 2억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떨어짐.

- 작은 기업규모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기업 간 M&A는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음.³⁴⁾

- 2002~2004년간 핵심생명공학 기업의 수는 360개에서 349개로 감소

• 동 기간 중 핵심 생명공학 기업의 종업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규모 생명과학 관련 기업의 종업원 수는 16% 증가

• 동 기간 매출액도 핵심 생명공학 기업의 경우 9% 증가, 생명과학 관련 대기업의 생명공학 부문은 3% 증가

- 독일생명공학산업협회를 위시한 업계 관련 인사들은 이러한 구조조정 및 대기업의 확장 추세가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환영하는 입장

□ 이러한 기업 간 M&A는 해당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³⁵⁾

34) Haeussler(2007)

3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

- 2002년의 큐라키테(CuracYTE) AG와 비타레스크 바이오텍(Vitaresc Biotech) AG 간의 합병은 두 기업의 취약점을 상호보완하는 성격을 띤.
 - 자본은 풍부하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큐라키테 AG는 신기술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던 비타레스크 바이오텍 AG와 합병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
 - 합병을 위해 투자자들은 추가로 700만 유로를 투자함.
- 비아셀(ViaCell)도 쿠리온 테라퓨틱스(Kourion Therapeutics) AG 인수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
 - 쿠리온 테라퓨틱스 AG사는 비아셀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심장과 정형외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 비아셀은 쿠리온 테라퓨틱스 AG의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단위요법 관련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제대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 독일의 산업자본은 전통적으로 금융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를 지님.³⁶⁾

- 독일의 3대 은행의 대주주인 알리안츠(Allianz) 보험회사의 경우, 1,000억 마르크를 상회하는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는 적대적 인수로부터 기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함.

□ 그러나 변화하는 독일 자본시장과 독일정부의 양도세 세제개혁은 금융업계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듦.

- 지금까지 독일 기업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 왔던 독일 대형은행들은 그 자신들도 자본시장으로부터 과감한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36) 최연혜(2000)

-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알리안츠사를 들 수 있음.
 - 알리안츠의 독일시장 의존도는 전체 보험금의 40%, 종업원의 35%, 그리고 기업 지분 면에서 약 50% 수준에 불과
 - 2006년 6월 알리안츠는 7,480명의 인원감축을 발표했으며, 구조조정을 위해 6억2천만 달러에서 7억5천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³⁷⁾
- 특히 양도세 세제개혁으로 금융권의 피지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변화하여 독일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5. 신성장 동력 확충

- 독일경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된 데는 미국·영국에 비해 산업구조의 상대적인 낙후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³⁸⁾
 -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미국·영국에 비해 높은 반면 전기 전자, 통신, IT·바이오, 우주항공 등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술집약 산업과 서비스에서 열세
 - 산업구조가 낙후된 것은 90년대 전반 통일비용의 과다 지출로 R&D 투자 여력이 약화된 탓이 큼.
- 전통적 주요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산업 등 첨단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바이에른(Bayern)주가 IT산업, 베를린이 BT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 독일 내 BT 관련 회사들과 연구기관들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집중

37) *Insurance Journal*(2006)

38) 독일 산업구조의 문제점은 김득갑(2002), pp.32-37을 참조.

- 95년 이후 이 지역에 위치한 생명분야 기업의 수는 100여 개 이상으로 증가, 산학 연계로 신기술 개발
 - 생명공학 비즈니스 파크를 건설 중
- 2001년 이후 베를린의 BT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2001년 수출 59억 달러, 전년에 비해 약 20% 증가)
- 바이에른(Bayern)주에는 2만 개 이상의 IT 기업들이 약 35만 명을 고용
 - 고용 측면에서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생산, 텔레비전과 커뮤니케이션 부문, 소프트웨어 산업의 각 29%, 36%, 28%, 그리고 20%를 차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협력을 위한 경쟁’과 수월성 원칙을 기본 철학으로 각종 산업 및 지역 혁신 정책들을 펴고 있음.³⁹⁾

- 지역클러스터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레지오, 이노레지오, EXIST 등을 들 수 있음.
-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1995년에 BMBF에 의해 개시됨.⁴⁰⁾
- 1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선발되어 2002년까지 지원을 받음.
 - BioProfile, BioChance, BioFuture 등의 후속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용되고 있음.
- 이노레지오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의 혁신능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며, 1999년에 개시됨.
- EXIST 프로그램은 대학과 민간부문 간의 지식이전과 대학창업을 증진

39) 황혜란(2006)

40) 2001년에 완료되었음.

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에 도입됨.

□ 독일의 나노/바이오 관련 첨단 기술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우수한 기술 혁신력이 효과적으로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독일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의 ‘소재연구’, ‘물리 기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기술 육성을 시작⁴¹⁾
 -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나노기술 개발로 인해 2006년 말까지 10,000~1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 특히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재료/제조, 전자&광학, 바이오테크/의료와 장비개발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 1990년대 후반부터 나노기술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국면
 - 2002년에 예산 계획, 신진과학자 육성, 나노기술의 기회와 위험성에 관한 국가나노기술계획을 수립함.
 - 2004년에는 새로운 나노기술개발 전략을 발표, 제품화가 가능한 나노기술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
 - 2005년 11월 기준으로 나노기술 관련 독일 기업 수는 약 450개
 - 약 2만 명에서 32000명이 직간접적으로 나노기술 관련 기업에서 종사
 - 독일 내의 나노기술 관련업체는 주로 연구소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스피노프 기업
 - BMBF는 나노전자, 나노소재 등의 우선전력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공공연구기관은 기초연구에 중점을 둠.

41) 독일의 나노산업과 클러스터 현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5) 참조.

<표 8> 독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예산

(단위: 백만 유로)

기관		2002	2003	2004	2005
	연방교육연구부	73.9	88.2	123.8	129.2
	연방경제노동부	21.1	24.5	23.5	23.7
공공 연구 기관	독일연구협회	60	60	60	60
	라이프니찌 연구협회	23.7	23.6	23.4	23.5
	헬름홀쯔 연구협회	38.2	37.1	37.4	37.8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14.8	14.8	14.8	14.8
	프라운호프 연구협회	4.6	5.4	5.2	4.9
	유럽첨단학술연구센터	1.8	3.3	4	4.4
	소계	143.1	144.2	144.8	145.4
	합계	238.1	256.9	292.1	298.3

자료: 독일연방교육연구부(2004)

- 독일정부는 주정부와 공동 지원프로젝트인 산학연 협력의 나노기술 관할 센터(Competence Center Nanotechnology) 육성으로 소위 클러스터 형성
 - 클러스터는 지역적 개념이 아닌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협회성격이 강함.
 - 정부 지원으로 구성된 CCN은 9개, 기타 대학 내 연구센터가 4개로 집계, 참여기업은 440여 개
- 독일은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 자동차, 전자, 광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나노전자공학과 관련된 독일 전자제품 및 부품시장은 현재 약 200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낮은 형편이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형 엔진 개발, 공해물질 감소 등의 환경관련 부분과 승객의 안전과 편의 등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표 9> 독일의 지역별 나노기술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이름	활동내용
함부르크	HansellanoTec	함부르크지역 다학제연구 및 산학연 연구 지원 스캐닝 프로브(ASPRIT), 단분자터널링 분광학 프로젝트 추진 9개 기업, 3개 대학, 3개 연구소 참여
뮌스터	Ilanoanalytics	연구개발, 표준화, 벤처창업 지원, 교육 및 연구, 대중활동 표면 및 계면 특성 분석 서비스 운영 34개 제조기업, 37개 연구그룹 참여
뮌헨	ElIllaB	기초연구의 산업화 이전 촉진, 정보교류, 대중활동 나노바이오기술 분야 연구 2개 대기업, 8개 중소기업, 2개 서비스기업, 14개 신진 연구그룹 참여
카이저슬라우테른	IlanoBioTech	나노바이오기술 분야 상담 및 신생기업 지원, 일반인 교육 등 수행 유럽차원의 나노바이오기술 분야의 네트워크인 "Ilano2Life" 참여 나노바이오기술 원격학습 프로그램, 교육용 키트 제작 26개 중소기업, 7개 연구소, 12개 전문기관(기술이전, 학회 등) 참여
자트브뤼헨	IlanoChem	기술이전, 스핀오프, 교육활동, 국제연계활동 등 추진 나노기술과 화학 서머스쿨 개최, 나노기술정보제공 나노입자, 광학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표면공학 분야 연구 62개 기업, 70여 개 연구기관 참여
칼스투에	Ilanollat	나노구조체 재료의 합성 연구 환경친화적인 맞춤형 소재개발 프로젝트 4개 대기업, 10개 대학, 8개 연구소 참여

지역	네트워크이름	활동내용
베를린	IlanoOp	광전자공학 소자 개발 4개 대기업, 4개 은행 및 VC, 12개 대학, 8개 연구소 참여
브라운 슈바이크	UPOB	초정밀표면처리, 비구면(asphere)의 고정밀 간섭측정 12개 중소기업, 4개 대기업, 12개 대학 참여
드레스덴	Ultra Thin Film	초박막 제조 및 응용, 고분자전해질 단분자를 이용한 나노입자제조 42개 중소기업, 9개 대기업, 10개 대학, 22개 연구소 참여

자료: VDI, Iletworks of Competence In Germany, Ilanotechnology(2006. 2), (<http://kompetenznetze.de>) 자료 재편집.

□ 독일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Bio Industry 2021'을 통해 관련 기술을 상업화하는 산학공동의 투자 기회를 제공⁴²⁾

- 2021년까지 6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에서의 추가 지원을 합치면 총 1억5천만 유로 규모의 산업용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전망
- 대학과 연구소들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기업 간 가치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
-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R&D 계획은 5년간 지원되며, 지원금의 범위는 기업은 비용의 50%, 대학 연구소는 100%

□ 독일은 미국·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옴.

- 독일은 경제규모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내수주도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42) 조세정(2006)

<표 10> 주요국 서비스 산업 비중

(단위: 총부가가치 대비 %)

	1995	2000	2005
프랑스	73.3	74.3	76.9
독일	66.6	68.5	70.4
이탈리아	66.4	68.7	70.9
일본	65.0	67.3	69.3
영국	67.4	72.5	75.9
미국	71.9	76.2	76.6

자료: OECD

- 90년대 이후 독일의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
 -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에 힘입어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업종은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 반면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유통, 물류, 운송, 관광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
 - 이들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은 각각 23%, 일본은 20%의 비중을 보인 반면 독일은 18%에 불과
 - 이는 상점 영업시간 제한, 대형유통매장 입지 조건 및 규모 제한 등 과도한 정부 규제와 각종 진입장벽 때문
-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독일의 서비스 산업은 총부가가치 대비 70%선을 넘어섰으나 미국·영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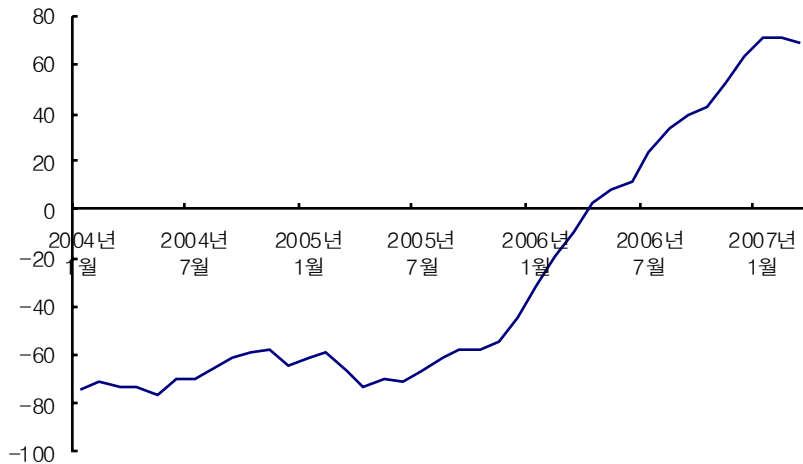
Ⅲ. 평가와 전망

- 독일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앞으로 2~3년간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 초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기가 소폭 하강하더라도 완만한 미시조정에 그치고 그동안 단행된 개혁의 성과가 이어질 가능성
 - 내년까지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는데다, 고용개선에 의한 소비 회복세 지속, 기업들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 증가세가 유지될 듯
 - 실업자 수는 약 48만 명 감소,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 명 증가
 -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성장률을 지난해 2.7%, 올해 2.1%, 내년 2.2%로 전망
 - 올해 초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작아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함에 따라, 당초 소비둔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경기가 둔화된 뒤 연말부터 경기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비스업의 호조와 3월 이후 소매업의 회복 징후 등에 힘입어 현재 하반기 전후의 조기 경기회복 및 성장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이 대두
 - 경기호조 및 부가세인상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올해 -1.2%, 내년 -1.0% 등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올 들어 세계경제의 둔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수출도 지난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증가 둔화로 경상수지는 내년까지 흑자기조를 강화할 전망

□ 독일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잔존

- 임금증가 가능성과 부가가치세 증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
 - 독일 최대 노조단체인 IG Metall이 최근 6.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협상 결과에 따라 타 부문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이 현재 미미하긴 하지만,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화 절상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
 - 높은 성장률과 임금상승 가능성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2007년 말까지 4.25%까지 인상할 가능성
- 세계경제의 둔화, 유로화 강세 경제적 불확실성의 여파로 올 들어 기업체 감경지수는 200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악화됨.
 - 기업의 현장경기전망을 반영하는 ZEW 지수는 70 이하를 기록

<그림 12> ZEW 경제환경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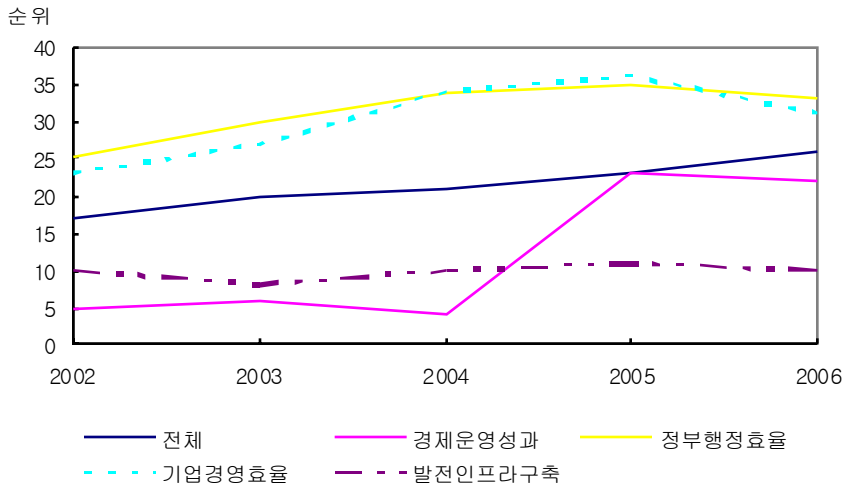


□ 일련의 개혁의 성공 가시화로 독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회복세로 전환할

발판을 마련했으나 지속 여부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실행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

- 독일의 국가경쟁력(IMD 기준)은 90년대 초 한때 미국을 제치고 2위까지 상승
- 그러나 90년대 중반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2006년 현재 26위

<그림 13> 독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 IMD

- 독일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최대 요인은 정부행정 및 기업경영효율의 상대적 열위
 - 2006년 부문별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 과학기술, 의료환경 등 발전인프라 순위(10위)는 높고 성장률, 무역, 고용 등 경제운영성과는 23위(2005년)에서 22위로 상승세로 반전
 - 반면 정부행정효율은 33위, 기업경영효율은 31위로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 미온적인 개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2%대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고 천명
- 그러나 1% 중반에 머물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과도한 수출의존은 세계경제의 경기하락의 충격에 노출 심화를 의미
 - 개혁이 미진한데다 해외경기 악화의 충격이 겹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1%대 성장률로 복귀할 가능성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에 힘입은 재정적자의 획기적인 감축세의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기 아직 이룸.

- 독일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안정계획은 실업수당지급에 따른 이전지출을 2007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3%씩 줄여 총 1.5%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독일경제가 2008년 이후 독일정부의 예상대로 2.3% 이상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야 가능
- 따라서 노동·복지·교육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성장잠재력이 제고되어야 재정건전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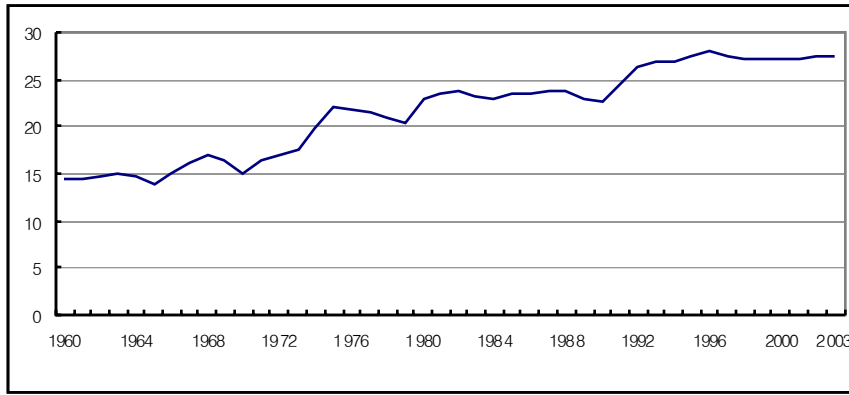
□ 막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독일경제의 큰 짐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및 경기침체 등으로 1990년대에 크게 늘어난 복지비 비중을 줄이는 데 뚜렷한 성과를 아직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통일과정에서 동독주민들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수혜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탓
- 실업률이 높아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 지출 감축이 쉽지 않음.

<그림 14> 독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OECD Historical Statistics;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6 at www.OECD.org

- 통일 후 동독주민의 합류에 따른 복지지출의 절대적 증가분은 독일경제가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 의한 노동참여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열위는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에 힘입어 1,622억 유로(약 2,132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수지는 232억 유로(약 305억 달러) 적자를 기록

<표 11> 독일의 국제수지 구조

(단위: 10억 유로)

	2004	2005	2006
경상수지	94.9	103.1	116.6
상품수지	156.1	158.2	162.2
서비스수지	-29.4	-28.9	-23.2
(여행수지)	(-35.3)	(-36.3)	(-33.5)
소득수지	13.1	20.8	23.0
경상이전수지	-27.9	-28.5	-26.8
자본수지	-118.0	-119.4	-146.3

자료: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서, 2007. 3.

-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경쟁법 개선 등 이미 발표한 계획의 시행이 중요
-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없이는 독일경제는 잠재성장률을 2%대로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IV. 시사점

□ 사회적 시장경제의 폐해와 통독의 후유증에 시달려 온 독일의 경제회복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성장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
 -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경제의 침체는 무리한 통일의 후유증 이전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해 온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큰 정부의 폐해가 바탕에 깔려 있음.
 - 큰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력저해,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조장, 복지재원조장을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음.
 - 양극화 해소와 인적자본 향상 등을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근로 및 기업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조세부담이 중요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4대연금 개혁이 시급함.
 - 독일은 연금보험료 인상 및 급여 인하 등 향후 연금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 추진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필요
 - 독일의 경우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효과가 큰 전통적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 추진되어 함.

- 독일의 경우 국내 전후방 연방효과가 큰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기 분야기계, 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수출호조와 함께 국내투자 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
 -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가 급증한 결실을 거두고 있음.
- 기업의 투자확대의욕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상승효과로 이어짐.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이 필요함.

-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무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을 적극 추진

□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기업규모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각종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최근 들어 수익성 저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규모의 경제 부재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바이오 및 나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M&A로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지속적 성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의 끊임없는 확충이 중요

- 독일은 90년대 통일비용 과다지출의 여파로 IT, BT 부문 등 신수종 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대가를 2000년대에 치루고 있음.
 - 신성장동력을 제때 확충치 않으면 10년 이상 경쟁력 열위를 만회하기 어려움.

- 독일이 뒤늦게나마 IT, BT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격차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독일에서 나노기술 개발로 인해 2006년 말까지 1만~1만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분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

- 독일이 미국·영국 등 경쟁국보다 전체 경제의 경쟁력이 약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서비스 산업의 취약 탓
- 이는 역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획기적 대책 필요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확충, M&A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이 거두고 있는 성과에 주목해야 함.
- 독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화환율 관리와 함께 R&D 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 등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

- 통일후유증에 시달린 독일경제가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남북 통일비용의 재원을 확충하여 통일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이 필요
-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십과 국력 결집이 중요

<참고문헌>

- 김득갑,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2.
11. 19.
- _____, 「독일 총선의 결과와 향후 전망」, 『SERI경제포커스』, 제5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9. 20.
- _____, 「독일 경제의 호조 배경과 향후 전망」, 『SERI경제포커스』, 제110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9. 18.
- _____,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성과 차이와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7.
- 김적교·김상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 김호기,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결과」, 오세훈 외, 『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배운다』, 황금가지, 2005, pp.56-77.
- 남현욱, 「통일전·후 사회-경제적 갈등해결에서 독일 국민복지국가정책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1999겨울), 1999, pp.315-331.
- 노동부,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 국제노동정책팀, 2006. 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12호, 2005. 4. 25.
- 대한상공회의소,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 2003.
- _____, 「지역노사정협의체의 역할과 파급영향」, 2006.
- 민경국, 「독일경제의 침체원인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임금연구』, 2003 가을.
- 박근갑, 「독일사민당과 신중도」, 송호근 편,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1.
- 산업연구원, 「주요국가의 인력활용 유형연구 및 고용의 유연안정화 방안」, 2005.
-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004.
- 안순권,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2.

- 안순권·김필현,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이슈분석, 2007년 5월호, pp.68-86.
- 월간 『midas』 4월호, 2006.
- 이민영,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5.
- 이영선·윤덕룡,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형: 배경, 적용, 현실』, 『주요국가의 경제모형과 경제학』 제4장, 한국경제연구원, 1998.
- 정동철, 『독일경제 호조의 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국제금융센터, 2007.
- 정진상, 『독일의 첨단기술 육성정책』, 한국산업기술재단, 2006.
- 조세정, 『독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Bio Industry 20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
- 중소기업연구원,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중소기업연구원 e-뉴스레터 <주간브리핑>, 2007. 1. 22.
- 최인혜,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합의 자본주의 -M&A 열풍에 휩싸인 독일대륙-』, FES-Information-Series, 200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독일 중소기업 진흥대책 발표』, 『Techno Leader’s Digest』, 제115호, 2006. 8. 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의 나노기술산업 육성 동향 및 시사점』, 200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echno Leader’s Digest』, 제83호, 2005.
- 한국은행, 『최근 독일의 경제개혁 추진 관련 논란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2004. 3. 29.
- _____,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개혁 논란』, 해외경제정보 제2004-114호, 2004.
- _____(2005a), 『독일의 경제현황 및 주요 현안』, 해외경제정보, 4. 12.
- _____(2005b), 『대연정 하에서 독일의 경제개혁정책 방향 전망』, 해외경제정보, 4. 12.
- _____,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6-29호, 2006. 7. 25.
- 황혜란, 『독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 협력을 위한

경쟁-, 대전발전연구원, 2006.

B. Aschhoff, T. Doherr, B. Ebersberger, B. Peters, C. Rammer and T. Schmidt, "Innovation in Germany," ZEW, 2006.

Baumgartner Hans J. and M. Caliendo, "Turning Unemployment into Self-Employment: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wo Start-Up Programmes-" IZA DP No.2660, 2007.

BDI, "BDI Economic Report," Issue 02/16, 2007. 4.

ERM quarterly: Issue 2 - Summer 2005.

ERM quarterly: Issue 1 - Spring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Annual Economic Report, 2007 Utilizing the Upswing for Reform, Germany, www.bmwi.de, 2007.

_____, "Growth aspects of Labor Market Policy, Learning from Neighbors," Expert Report for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07.

Fic, T. and C. Ghate, "The Welfare State, Thresholds,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Modelling* 22, 2005, pp.571-598.

Financial Times, "M&A: industrial big names fuel takeover activity-, 2006. 12. 8.

Haeussler. C., "Proactive versus reactive M&A activities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7, 2007, pp.109-123.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Results of the Ifo Investment Survey for Eastern Germany in Fall 2006, April 2007

Ifo Business Climate Germany, Results of the March 2007 Ifo Business Survey

- IM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6*.
- “Allianz Plans Restructuring; 7480 German Job Cuts,” *Insurance Journal*, 2006. 6. 2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ermany: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06/436, 2006. 12.
- _____, Country Report: Germany, 2006.
- _____, IMF Survey: European Focus, 2007.
- Jacoby L. and J. Kluve,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IZA DP No.2100, 2006.
- Kohler, W., “The Bazaar Effect, Unbundling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Migration,” CESifo Working Paper No.1932, 2007.
- Lena J. and J. Kluve,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IZA DP No.2100, 2006.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83*, Paris 1985.
- _____,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4*, Paris 1996.
-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04a*.
- _____,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b*.
- _____,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2006a*.
- _____,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2004c*.
- _____,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2006b*.
- Sapir, André,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paper presented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9 September 2005.
- Stephan D. and Fred Joutz, “What Explains Germany’s Rebounding Export Market Share?,” IMF, 2007.

Tietmeyer, H.,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Occasional Paper Series 03-05, November 2003, Institute for Global Economies/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3.

World Bank, "Doingbusiness in 2006 Creation jobs," www.worldbank.org.

World Economic Forum(WEF),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3.

Zademach. H., "Germany as an emerging archipelago economy: On some less obvious implications of corporate takeovers and mergers," CESifo Forum, 2006.

ZEWnews, various issues 2007.